

# 재건축에 정릉·흥천사 망가질 뻔

### 10일 정릉 스님 기자회견...문화재청 현상변경신청 심의 보류

세계문화유산 정릉과 원찰인 흥천사(주지 정법)가 대규모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훼손 위기에 몰렸으나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현상변경 신청이 재기 될 여지가 남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월 11일 문화재 사적분과 및 세계유산분과의 합동 심의를 열고 정릉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상 변경 신청을 심의했다. 19개동 752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6호 흥천사 극락보전 및 제67호 명부전 문화재로부터 불과 70m 떨어져 있다.

흥천사와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 등 시민들은 재건축으로 정릉과 흥천사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정릉과 흥천사의 문화재가 위협받게 된다.

더구나 재건축 조합은 현재 적법성 논란을 겪고 있다. '정릉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설

립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조합이 2009년 12월 31일~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추진한 조합설립 인가 추진 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화재청도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현상변경신청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 위원들은 심의에서 "정릉과 흥천사의 역사성을 고려해 경관 확보 등을 위한 충고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의 현상변경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합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상 변경을 신청해 왔다.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횡수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조정해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계속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정릉과 흥천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릉은 단릉으로 조성된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이다. 태조는 능역을 조성하고 능호를 정릉이라 칭했다. 아울러 흥천사(興天寺)를 지어 재궁으로 삼고 능침사찰로 정했다. 특



정릉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히 그동안 미입주 사찰로 남아 있던 흥천사는 통합종단 출범 50년 만에 정상화 돼 조계종으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조계종은 지난 해 10월 흥천사에서 사찰 운영권 정상화를 위한 인수인계를 갖고 종지종풍에 맞는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흥천사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에도 타종단 소속 스님이 사찰을 운영하고, 경내에 22가구가 불법으로 거주해 정상을 어렵게 겪어 왔다. 조계종은 정릉 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뒤, 흥천사에 상주하던 타 종단 스님들과

이주협약을 체결하고, 경내 거주 가구도 이주매매계약을 진행했다.

흥천사 주지 정법 스님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스님은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법 스님은 "정릉과 흥천사의 중요성, 인간과 역사, 문화의 공존의 필요성 등을 문화재청에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선암사 문화재 관리 또 '논란'

### 순천 시민단체들 "태고종단 차원에서 엄히 다뤄져야" 선암사 "시민단체 지적은 억측"



2011년 조사에서 행방의 손실을 설명하는 경당 스님

순천 지역 주민들이 최근 이뤄진 선암사 인사가 문화재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부,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선암사 문화재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9일 논평을 발표하고 선암사 문화재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립 28일 새롭게 당선된 주지 설운 스님이 발탁한 종무소 관계자들 중 문화재 관리 부실 논란 당시 성보 박물관 소임을 맡았던 스님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범시민대책위는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전수조사의 마무리 역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사찰문화재의 의도적 망실이나 대체는 태고종단 차원에서 엄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리 논란에 연관이 있는 스님들이 또 다시 선암사의 주요 소임을 맡을 경우 문화재 전수조사와 사라진 문화재의 행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암사 문화재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히 문제의 시기에 주지를 맡았던 지허 스님의 상좌이자 성보박물관 관리를 맡았던 승법 스님에게 이 일이 맡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법

스님은 설운 스님이 새롭게 주지로 선출되면서 선암사 총무 소임을 맡게 됐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또 선암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중간조사에서 600여 점의 문화재가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과 최소 7점의 문화재가 분실됐다는 결과와 단순한 사무작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선암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문화재 7점의 분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암사측은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암사의 한 스님은 "문화재가 보관된 수장고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관리를 맡았다는 이유로 주요 소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암사 수장고는 혼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지적은 지나친 억측이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 사성제로 풀어낸 분단 고통

### 민추분, 불교적 관점의 통일교육교재 발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불교적 관점의 통일교육교재를 발간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불교와 통일』은 남북의 불교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불교계 내에서의 통일교육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제작됐다. 민추분은 2009년부터 불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반 불자들을 위한 특강용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재는 불교 사상과 이론을 민족 문제에 접목시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특히 부제인 '분단 고(苦)를 넘어 불국정토로'에서 옛날 수 있듯이 분단 고통을 사성제(四聖諦)에 적용했다.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손실, 분단의 원인, 통일 한반도의 모습,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고(苦)·집(集)·멸(滅)·도(道)'에 적용한 것이다.

민추분 관계자는 "이번 발간을 계기로 불자대중들의 통일 의식이



더 고취되기 바라며 불교적 관점에 기초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불교계 기관 새해 맞아 업무 개편

### 시스템 효율 제고 위해

새해를 맞아 불교계 일부 기관들이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및 조직을 개편을 단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1일자로 사무국 업무 및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불교사회복지기획연구부문은 복지경영부문으로, 운영관리부문은 기획관리부문, 복지경영지원센터는 복지지원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육

인적자원관리부문은 기존 명칭이 유지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불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효율적 시설운영 관리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개편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단연구소도 구립 29일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불교미술연구원, 유적연구실, 행사사무국으로 개편됐다.

박기범 기자

### 법주사 능인수련원 등 NGO 지원단체 선정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사회복지 및 NGO 분야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졌다.

이번 공모에는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8개팀이 선정됐다. 워드아시아와 법주사 능인수련원은 '원폭피해자-그절망의 대물림에서 희망의 대물림으로'와 '비행청소년들의 마음 행감을 통한 우울 치유 프로그램 <울·화·통 캠프>'를 제출했다.

##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불교계도 '예의 주시'

### 중자연·대불청, "시대역행" 추이 지켜보며 대응 모색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재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불교계도 사태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교육활동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례를 심의했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서울 교육청이 보수 단체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의결된 뒤 일부 단체에서는 이번 조례가 교육

환경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 의원 외 7명은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계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보수단체의 주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의회에서 이송한대로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재의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인문회, 미래목회포럼 등 개신교계도 재의요구를 환영하고 나섰다. 개신교계는 그동안 조례안이 학생들에게 종교적 행사·행위 참여 강요 금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

요 금지, 종교과목 대체과목 선택 방해를 금지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불교계 단체들은 재의요구에 대한 논평이나 구체적인 대응 대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 자칫 종교간 갈등으로 비취질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정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학생들의 인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시민발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신교계가 이런 중요성들을 이해하고 상생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도 "재의요구는 서울시민들이 뜻을 외면한 처사다. 대불청은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